Vol. 41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7. 10. 23.

▌정책동향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등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사회적 농업의 주요 동향 등
- **언론 동향**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등

▌해외단신

- 미국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결과 등

▌국내단신

- 과학기술중심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지원

- 2017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자료 :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2017.10.18.)

❑ 개요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10.18.]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1. 의의 및 특징〉

○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

○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

○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

○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2. 기본 방향〉

○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다만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가·보완

○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

○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구성 ▐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공공일자리 창출	③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7개
민간일자리 창출	④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개

정책동향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⑦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일자리 질 개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핵심과제 10선 ▐

1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구축 및 진출분야 다양화

2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고 연대보증 폐지※※로 재기지원
※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평가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2018.上) → 민간금융으로 확산 유도

3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 (교수) 창업휴직기간 확대, 대학평가 시 창업실적 확대, (연구원·공공기관) 창업휴직 시 별도정원 인정 등
※※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 원 소득공제 → (확대)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 원 인정

4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3대 핵심산업 역량 강화 → ① 주력 제조업 고도화, ② 미래형 신산업 조기사업화, ③ 서비스산업 혁신
① 정부합동지원반을 통한 투자·일자리 프로젝트 발굴 → '산업 혁신성장 전략'(2017.4/4)
② 친환경·스마트카,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③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글로벌화 추진, 업종간 융복합 촉진 등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2017.4/4)

5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정책금융·공공구매·R&D 집중 지원 등

6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 3종 세트
①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을 위한 입법(일반법+개별법) 추진
②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 신속인증제 활성화
③ 민관협업을 통한 현장 규제애로 신속 해결

7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지역일자리의 거점으로
※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 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등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 이하로 축소(2017: 19.5% → 2022: 9.1)
※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 →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 생명·안전 직결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 축소) 등

9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

10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 구직촉진수당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 마련(2018.1/4)
※※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 → (개선) 가족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특징〉

○ [정의]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유사 개념: 제3부문, 비영리섹터, 자발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

○ [특징]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 존재

- **(자율·민주)** 효율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
- **(사회통합)**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 간 **이익공유·취약계·일자리창출·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 **(경쟁·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2. 추진 배경〉

○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적자본 축적**에 **효과적**이며, **EU 주요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경제 축**으로서 역할

※ EU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비중도 평균 6.5%이고, 10%를 상회하는 국가도 있음.

※ 고용인구 중 사회적경제 고용 비율(2015, %): EU(6.5), 프랑스(9.0), 벨기에(10.3)

○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가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2015)

- 금융, 판로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진출분야**도 **제한적**

〈3. 새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

○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 추진**※

※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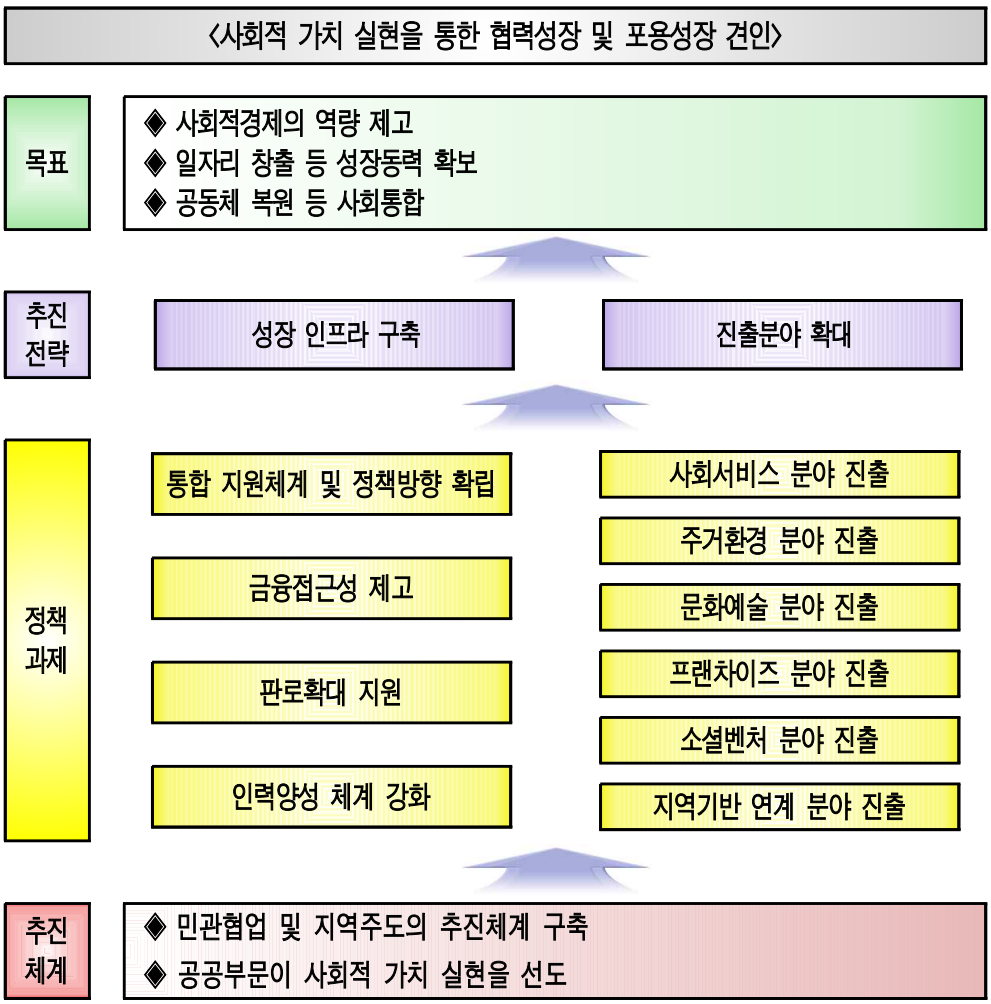
-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

※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

※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목표 및 발전전략▐



정책동향

〈4.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핵심과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핵심과제 ▐

핵심 과제	주요 내용
1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 (임팩트펀드) 1천억 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 조성 •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계정 신설 • (투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에 100억 원 추가 출자, 사회투자펀드 300억 원 신규 조성 • (정책자금) 중소기업(2018년, 350억 원), 소상공인(2018년, 50억 원) 정책자금 총액 대출목표 신설
2 창업·성장·재기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 (창업) TIPS(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를 통한 우수 소셜벤처 육성, '소셜캠퍼스 온(溫)' 확대(3개 → 9) 등 • (성장·재기) 금융·R&D 등 성장지원 강화, 전문 멘토링 등으로 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 (저변확산)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강화, 대학 학위과정 확대 등
3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선도	• (사회책임조달) 공공조달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 신설, 사회적책임 가점 상향조정 • (우선구매) 국가·지자체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서비스 구매 의무화, 수의계약 제도 신설
4 신재생에너지·도시재생·사회서비스·프랜차이즈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참여 지원 • (도시재생)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도입, 사업 공모 심사 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도 반영 • (사회서비스) 진입장벽 해소, 문제법인의 수탁 금지, 서비스제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강화 • (프랜차이즈) 업종별 사업모델 개발, 협력시스템 마련·브랜드 개발·IT 환경 구축 등 지원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진출확대로 소외층 문화향유권 증진 • (지역기반) 주민중심 마을기업의 집중 육성 및 농어촌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참고: 과제별 추진 일정 (농식품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_지역기반 연계 분야 (13개 과제)		일정	부처
41	• 농어업 융·복합 산업화 활성화 – 스타트업스쿨, 보육매니저 도입 – 농어촌 관광 콘텐츠·자원 확충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산업화 지구 확대	2017.下~2018.上 2018 ~2022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
98	• 귀농어·귀촌 지원 – 신중년 귀농 창업교육 확대 –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자금지원 확대	2017.下 2018~2019	농식품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과제		일정	부처
10-7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회적 농업법 제정, 예산안 반영)	2018.下	농식품부
10-8	농·수협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한 판매지원	2017.下~	농식품부·해양수산부
10-11	유통, 관광 등 주요행사와 연계한 판로지원(예산안 반영)	2017.下~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 업무보고 참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2017.10.19.)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 업무보고 참석, 10.19.]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함께 농정방향인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 위해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보급, △쌀 생산 조정제 적극 지원, △밭 농업 기계화 촉진,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등 주요 현안 해결 및 기술개발·보급,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 기술(ICT, BT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우리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미래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연계되도록 연구역량 집중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이 가능한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강조〉

◈ '밭농업 기계화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여성·고령 농업인 등이 사용하기 편한 농기계를 개발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관련 품종·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진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

◈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 대비한 AI 등 가축질병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축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 사양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역설

◈ 우리 농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농촌진흥청의 기초연구 역량강화를 당부

국토교통부-농촌진흥청, 농촌 교통안전 지원 협업

자료 : 국토교통부 · 농촌진흥청(2017.10.18.)

○ [국토교통부·농촌진흥청, 「2017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추진, 10.18.] 농촌지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11월 10일까지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상위 20개 시군의 5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 국토교통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실시

※※ 대상: 전남(6시군 / 16마을), 경북(6 / 15), 경남(4 / 10), 전북·제주·경기·충남(4 / 9)

- (지원 사업) △농기계, 자전거 등 도로주행형 기종의 야간 도로운행 시 잘 보일 수 있도록 안전반사판 등을 부착하고, △마을 주민 대상 농기계 안전이용 및 보행 중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실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안전지팡이 등의 안전용품을 지급

- (기대 효과) 농기계 교통사고에 취약했던 지역의 교통안전 환경이 개선되어 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가 감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0.17.)

○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 건립, 10.17.]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여 다품목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남 나주에 건립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수: (2010) 4,122개소 → (2013) 4,851 → (2016) 5,446

- (기대 효과) 물류센터를 통해 수도권, 부산, 전남, 경북지역의 학교급식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량수요처 발굴(물류센터 마케팅팀 운영) 및 농협 계통 판매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득안정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

- (향후 계획)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범위를 생산중심에서 유통, 가공, 환경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인증비용 지원 등 농업인의 적정소득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 육성 정책 추진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위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농림축산식품부(2017.10.18.)

○ [국무조정실 2차장(노형욱) 주재,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 개최, 10.17.]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현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

※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등 각 부처 담당 실·국장급

- (농식품부)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2017.12.3일 검역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10.16일부터 조기 시행

-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컨테이너 하역 시 외관 및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 등의 조치

- (농식품부·환경부) 국가 간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한중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

AI(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동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7.10.19.) · 농림축산식품부(2017.10.17./20.)

○ [농식품부, 충남 서산(간월호, 천수만), 서울(강서지구, 중랑천) 야생조류 분변 AI 저병원성으로 확진, 10.16.] 지난 10월 10일 충남 서산(간월호, 천수만), 서울 강서지구(B) 및 중랑천(A)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4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검사결과 10월 16일 저병원성 AI로 확진

※ 아울러, 서울 강서지구(A) 및 중랑천(B) 2건과 경기 화성 황구지천 및 안성 안성천 2건 등 4건은 검사가 진행 중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 상황▐

No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일	혈청형확인일	확진판정일	판정결과
①	충남 서산 부석면 간월도리 405-1 (간월호)	10.10.	10.12.	10.16.	저병원성(H3, H4)
②	충남 서산 부석면 지산리 1607-1 (천수만)	10.10.	10.12.	10.16.	저병원성(H1)
③	경기 화성 정남면 귀래리 100-72 (황구지천)	10.10.	10.13.	검사 중	-
④	경기 안성 공도읍 산두리 438 (안성천)	10.10.	10.13.	검사 중	-
⑤	서울 강서 방화동 4-4 (강서지구 A)	10.10.	10.13.	검사 중	-
⑥	서울 강서 방화동 5-3 (강서지구 B)	10.10.	10.13.	10.16.	저병원성(H5N3)
⑦	서울 성동 금호동4가 21-1 (중랑천 A)	10.10.	10.13.	10.16.	저병원성(H5N3)
⑧	서울 성동 용답동 203 (중랑천 B)	10.10.	10.13.	검사 중	-

○ [전북 익산(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 10.20일 저병원성 AI 확진] 농식품부, 환경부가 10.11일 전북 익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10.19일 알려옴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하였으나, 10.21일 저병원성 AI(H5N2, H6N2형)로 확진·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지역 방역대 해제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10.19.] AI, 살충제 달걀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확정

※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복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등

-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 AI 발생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예측모델을 고도화(2017.12.)하고, 고감도 현장 진단키트 개발,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개발도 추진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0.18.)

○ [농식품부,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10.26.~28., 만간육종연구단지] '미래를 품은 씨앗'이라는 주제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마련

※ (주최/주관) 농식품부·전라북도·김제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협조: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한국종자협회)

- (주요 내용)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종자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10ha 규모로 종자기업·유관기관의 품종·기술 전시홍보, 학술행사 및 부대행사 등 산업교류관, 주제전시관을 운영하며, 특히 전시포·전시온실에 직접 재배·전시

'2017 강소농 대전'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7.10.20.)

○ [농촌진흥청, '2017 강소농※ 대전' 개최※※, 10.25.~28., 서울 코엑스] '함께하는 강소농! 신나는 자율모임체'라는 주제로 농산물과 가공품이 전시, 판매되며 체험프로그램, 강소농 재능기부콘서트, 소비자 참여 농산물 경매 등 다양한 홍보행사가 마련

※ 강소농(强小農)은 영농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 경영체를 말하며, 농촌진흥청은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진단·맞춤형교육·경영상담(컨설팅)을 지원(현재 약 7만4천 명의 강소농 육성, 강소농 스스로 영농기술을 학습하고 공유하기 위해 결성한 '자율모임체'는 약 477개소)

※※ (주최/주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자료 : 행정안전부(2017.10.19.)

○ [행정안전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19.] 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12월까지 지속될 전망

- (농업용수 가뭄)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은 평년(72%)의 94% 수준으로 가뭄 심함 단계는 아니며, 현재 울산(울주군)·경북(경주시)·경남(밀양시)지역 3개 시·군이 주의 단계※로 12월까지 지속될 전망

※ ※ 주의(Yellow) → 심함(Orange) → 매우심함(Red)

- (농식품부) 물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하여 하천수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하여 저수지 물채우기와 관정개발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할 계획

아젠다발굴 사회적 농업의 주요 동향 등

이슈 브리프 사회적 농업의 주요 동향 등

❑ 사회적 농업의 주요 동향

※ 농협에서 발간한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농협의 역할" (CEO Focus 387호, 2017.8.)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의 등장〉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농업**이 **포함**되면서 관심 고조

- 전통적 생산 중심 농업에서 탈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농업**을 통한 **새로운 발전 모델 필요성**을 제기

○ **유럽**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건강과 돌봄, 치유, 환경보전**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이 발전했으며, 오래전부터 **사회적 농업**이 **농업**의 한 **분야**로 **인정**되어 운영

○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

- 농업의 **생산 기능**이나 **관광농업**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농업 발전 모델**로 **트렌드 전환**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

○ 사회적 농업은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외연**을 **확장**해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국민 건강 및 행복 증진'**과 **'취약계층의 재활'**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효과〉

○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농업은 **"농업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의 **재활**을 통해 **심신 치유**와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농업" 으로 정의

※ 임송수·임지은(2017)은 "농장에서 자연을 매개로 제공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

※ 농식품부(2017)는 사회적 농업을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돕고, 고용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농업"으로 정의 ⇒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즉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지향하는 실천적 농업

아젠다 발굴

○ [사회적 농업 효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치유 및 예방 효과와 취약계층 대상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농가-국민-정부가 상호 소통하면서 교육과 훈련, 고용, 치유, 사회적 통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

〈사회적 농업의 국내·외 현황〉

○ 유럽의 사회적 농업 현황과 특징

- (네덜란드) 농가는 공인된 복지기관의 계약자로서, 정부보조 또는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 예산(PGB)을 통해 지원하고 사회적 서비스 품질인증체제를 도입
- (이탈리아) 세계 최초로 사회적 농업을 법으로 승인,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포용에 중점
- (벨기에) 2005년을 기점으로 돌봄농가 등록제와 공공지원 체계 도입
- (영국) 2003년 설립된 독립적 자선기관 「Care Farming UK(영국 돌봄 영농네트워크)」 중심으로 농가와 관련 기관 사이 연결망을 구축, 녹색 돌봄 서비스 지원
- (독일) 지적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작업공동체나 보호작업장, 또는 학교 안 농장 조성 등의 형태로 발전

○ [일본의 사회적 농업 현황과 특징] 20세기 후반부터 확산된 원예요법과 원예복지의 영향으로 사회적 농업 발전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2013년 '농업'과 '복지'를 상호 연계(農福連携)하는 정책을 본격 제시하면서 치유농업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

○ [우리나라 민간차원의 사회적 농업 현황]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치유농업이 대세

- (경북 경산의 '(주)뜨락' 원예치료센터) 농업체험과 원예활동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험 제공
- (충남 홍성의 협동조합 '행복농장') 전국 최초 생산기반 치유농업으로 지역의 친환경적 요소와 결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농업 추진 현황]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와 '사회적농업법' 제정 추진 포함

- (강원도) 지자체 중 최초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을 조례로 제정
- (경상북도 영주시) 2014년부터 '치유농업발전연구회' 운영
- (전라북도 순창군) 치유농업 시범농장 선정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농산물 활용 치유 상차림 개발 등을 통한 6차산업 성공모델 확산

농촌지역 비농업 활동에서의 혁신의 효과

※ 미 농업부 산하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Innovation in the Rural Nonfarm Economy: Its Effect on Job and Earnings Growth" 보고서(USDA ERS, 2017년 9월 발행)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미국 농업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2014년에 농촌기업의 혁신※에 관한 설문조사(Rural Establishment Innovation Survey, REIS)를 실시하였음.

※ 혁신은 소비자들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재화·서비스·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혁신에는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과 이용자 혁신이 있음. 이용자 혁신은 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풀뿌리 혁신(grassroots innovation)이라고도 함.

○ 조사 결과, 도시 기업이 농촌 기업에 비해 실질적인 혁신주체※(substantive innovator)일 확률이 더 높았으나, 제조업의 경우 혁신이 나타나는 비율이 도농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실질적 혁신주체는 현재 상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혁신적인 행동을 보이는 기업을 의미함.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혁신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 도시가 농촌에 비해 혁신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도농 간에 기업들의 분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도시는 농촌에 비해 혁신집약적인 제조업자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 혁신은 도시 지역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농촌 지역에서 혁신적인 제조업은 제약, 화학, 컴퓨터, 플라스틱 등이었음.
- 직물공장 역시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물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어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 농촌 지역에서 유일하게 혁신적인 서비스업은 통신업과 도매 전기 시장이었음. 도시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업은 방송, 데이터 처리, 웹호스팅 및 관련 산업, 항공 교통, 경영 관리 시설 등이었음.

○ 고용 측면에서 농촌의 혁신적인 산업은 非혁신적 산업에 비해 그리 높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

- 수입 재화와 경쟁하는 혁신적 산업은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혁신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고용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 다만 지역 단위의 분석 결과, 기업의 혁신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혁신적인 농촌 통근지역에서의 산업들은 다른 통근지역의 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등

※ 아젠다 발굴을 위해 농업전문지(주요 일간지 등)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10.16.]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라는 농정 지표를 정했다며 안전한 식품을 공급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두겠다고 설명, "앞으로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을 가장 큰 모토로 삼고 일을 해 나가겠다" 고 밝혀

- (쌀값 관련) 최근 쌀값 회복세 관련해 "쌀값이 (80kg기준) 15만 원 선을 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쌀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 "쌀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농정 개혁을 위해 일어선 것이라고 생각, 이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위해 일하겠다", "내년에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 10만ha를 감축할 계획"
-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9.28.) 관련) "37만t이면 충분할 것, 37만t 격리도 사실은 공급 초과량보다 더 격리, 정부가 정부양곡을 전혀 풀지 않고 신곡을 37만t 격리하면 사실 내년 8월 정도 되면 쌀이 부족해진다", "시중에 쌀이 없으면 국민 불안이 온다"
- (2018년 농식품부 예산 관련) "쌀값 회복, 기축 질병 예방, 식품안전 등 현안 해결에 집중 편성하겠다"
- (한·미 FTA 개정문제) "우리 농산물 시장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 관련) "청탁금지법 가액은 내년 2월 설 이전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응하겠다", "청탁금지법은 11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농어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
- (AI 문제 관련)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서 일단락 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AI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 (향후 주요 과제) 재해보험, 농어민 안전보험, 동물복지형 축사 문제, 농산물 가격안정, FTA 등과 수입보장보험 확대 방안 등을 거론했으며,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농업·농촌·식품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 고 밝혀

아젠다 발굴

자료: "김영록 장관 쌀값 안정시키며 생산조정제 도입할 것" (국민일보, 2017.10.16.), "김영록 "내년 설 이전 청탁금지법 개정…농업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서울경제, 2017.10.16.), "농업·식품산업 발전…5개년 계획 연내 마련 김영록 장관 취임 100일" (서울신문, 2017.10.16.), "취임 100일 김영록 장관 농업·농촌·식품발전 5개년계획 마련" (연합뉴스, 2017.10.16.),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올해 농업·농촌·식품발전 5개년 계획 마련" (헤럴드경제, 2017.10.16.), "김영록 장관 쌀값 15kg 이상 유지 최우선 노력" (SBS CNBC, 2017.10.16.), "쌀값 15만원 선…한고비 넘겨" (농민신문, 2017.10.18.), "현장중심 농정개혁 모토로" (농수축산신문, 2017.10.18.)

헌법개정 관련 주요 동향

○ ['농민권리와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농민헌법운동본부), 10.18일 출범식에 앞서 기자간담회 개최, 10.17.] '왜 헌법에 농업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농업조항을 마련해야 하는지', '농업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향후 활동은 무엇인지' 등 농업조항을 둘러싼 일련의 구상들을 설명

-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에 강력한 농업조항이 있다면 이는 농민 대변 정책 수립 기반이 될 것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성격 반영하여 헌법에 담을 6가지 농업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경자유전의 원칙과 연계된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담보하는 조항'
- 2)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개발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 3) 농가소득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
- 4) 먹거리 안전을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간 대립구조를 깰 수 있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
- 5) 여성농업인의 역할 제고 차원인 '여성농민의 역할을 권리로서 담보하는 조항'
- 6) 농민들의 자조조직을 지원·육성하는 '농촌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

○ [개헌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내용] △먹거리의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에 관한 조항,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 유지 등을 제시

○ 농민헌법운동본부, 향후 헌법개정 과정에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조직을 확대할 계획

자료: "농민헌법운동본부 "농민 권리 보장, 헌법 정신에 담아야"" (한국농어민신문, 2017.10.17.), "농민권리 위한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농축유통신문, 2017.10.20.)

한·미 FTA 협상 주요 동향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국장, 한·미 FTA 개정 협상,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10.18.]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은 20년이 넘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는 그 영향력에서 차이가 클 것이란 것

- (주요 언급※) "한국과 미국은 이미 오랜 기간 무역관계를 유지해왔다", "물론 (FTA 개정 협상이) 한국 경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한국이 그간 미국과 무역을 하며 FTA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0.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경제·환경 위기 대응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중 언급한 내용

○ [NAFTA 재협상 기한이 연장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10.18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NAFTA 재협상에서 미국 측이 조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조만간 막이 오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미국 측이 강경 모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등 3개국 협상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끝난 제4차 재협상 회의가 전반적으로 난항을 겪자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

※※ 백악관 일각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을 강경하게 밀어붙여 무역 규모가 큰 NAFTA 재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제시

○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한미 민관경제포럼 참석(10.19.)차 방한하여 한·미 FTA 폐기 땐 美쇠고기 더 타격 언급] "한·미 FTA 폐지 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품목 중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이며 쇠고기 수출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지지 성향이 강한 주(州)들에 중요", "한·미 FTA 폐지 논의가 나오지만 이 협정이 미국에도 이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11.7~8일)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한·미 FTA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망

자료: "나프타 재협상 '난항' …한미FTA 영향은?" (서울경제, 2017.10.18.), "OECD 사무총장 한미FTA 개정협상, 韓경제 큰 타격 없을 것" (연합뉴스, 2017.10.18.), "한미FTA 폐기땐 美쇠고기 더 타격… 트럼프 방한, 중요성 인식 계기될 것" (동아일보, 2017.10.20.)

해외단신 미국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결과 등

❑ 미국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결과

○ [대상국가] 세계

○ [자료출처] 미국 재무부, 기획재정부(2017.10.18.)

○ [미국 재무부, 2017년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발표, 10.18.]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13개 국가※※를 평가했으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음.

※ 美 재무부 홈페이지에 게시(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하였고,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중국, 일본,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인도, 한국, 캐나다, 프랑스, 대만, 스위스, 영국, 브라질(對美 무역흑자 順, 4월 대비 브라질 추가)

○ [평가 결과]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4개국, 과다한 對美 흑자국인 중국 등 총 5개국(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대만의 경우 2회 연속 1개 요건(경상수지 흑자)만 충족해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 3개 요건 중 2개 충족 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2017.4월 보고서부터 對美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 분류(한번 관찰대상국 분류 시 최소 2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 (중국) 對美 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과다한 對美 흑자 규모
- (일본·독일·한국) 對美 흑자 + 경상흑자 요건 충족
- (스위스) 경상흑자 + 시장개입 요건 충족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① 對美흑자 220억 달러(○), ② 경상흑자/GDP 5.7%(○), ③ 시장개입 49억 달러, 0.3%(×)

- (對美 무역흑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억 달러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를 포함할 경우 1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 (경상수지 흑자) 2017년 상반기 중 5.3%로 감소,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

- (시장개입) 원화가 달러화 대비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을 줄였다고 적시※

※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9월까지 달러화 대비 5.4% 절상되었으나, 실질실효환율 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 [정책 권고] 외환시장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sufficient 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적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관찰대상국에 대한 세부평가 주요내용▐

국가	평가 주요내용
중국	•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1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2016.7~2017.6월 3,570억 달러(대미 무역흑자 1위) ② GDP 대비 경상흑자 1.3% ③ 급격한 위안화 절하 방어 개입(매수개입 규모 GDP대비 △2.7%) • 과거 10년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일방향 개입 이후, 최근의 시장 개입은 자본 규제(capital control)를 강화하고 위안화 고시환율을 매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안화 절하를 방어 •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필요
일본	•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2016.7~2017.6월 690억 달러 ② GDP 대비 경상흑자 3.7% ③ 최근 6년간 시장개입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장기 성장률을 제고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유연한 재정정책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이 필요
독일	•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2016.7~2017.6월 630억 달러 ② GDP 대비 경상흑자 7.7%(약 2,700억 달러로 경상흑자 세계 1위) ③ 유로존에 포함되어 독자적 통화·환율정책 없으며, ECB(European Central Bank)는 지난 15년간 시장개입 하지 않고 있음. • 독일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대규모 흑자국으로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책임이 있음. • 이의 해결을 위해 내수 활성화,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유로화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켜 과다한 대외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필요
스위스	•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2016.7~2017.6월 130억 달러 ② GDP 대비 경상흑자 10.3% ③ 매수개입 규모 GDP대비 8.7% • 과거 수년 동안 상당한 자본유입(safe haven)으로 인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환시장 매수개입 실시 •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에만 의존하기보다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전통적인 금리, 통화정책을 활용할 필요

WTO 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2017.1~8월)

○ [대상국가] 세계

○ [자료출처] WTO(세계무역기구), 산업통상자원부(2017.10.17.)

※ WTO에서 발표한 2017년 8월까지 "월간 상품수출 통계(10.17일 발표, 한국시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자료

○ [세계수출동향] 올해 1~8월 전 세계※ 상품수출 10.5조 달러

※ 주요 71개국 수출 합계(세계 교역의 90% 차지)

※ 분기별·월별 수출증가율(%): (2017.1Q) 10.2 → (2017.2Q) 7.2 → (7월) 9.8 → (8월) 10.3

○ [세계 10대 수출국 비교] △한국‥세계 10대 수출국※ 중 1~8월(누적) 수출증가율 1위(16.4%) 기록, ② 금년 1분기(14.7%)·2분기(16.7%)에 이어 1~8월(누적)도 연속 1위

※ 1~8월 주요국 수출증가율 순위: (1위) 한국, (2위) 네덜란드, (3위) 일본, (4위) 홍콩, (5위)중국

※ 한국의 1~8월 수출증가율(%): (2017.1Q) 14.7 → (2017.2Q) 16.7 → (7월) 19.5 → (8월) 17.3

- (8월 수출) △10대 수출국 중 8월 두자릿수 증가율 기록국가는 한국(17.3%) 포함 총 4개국※, △한국의 8월 수출은 전세계 수출증가율(10.3%)을 크게 상회

※ 8월 수출증감률(%, 10대 수출국): (1위) 네덜란드(18.9), (2위) 한국(17.3), (3위) 이탈리아(14.2), (4위) 독일(12.8)

- (1~8월 누적 수출) △1~8월 누적 증가율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위(16.4%), △주요국 대비 높은 증가율로 한국 수출순위는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6위※※ 유지, △10대 수출국 중 중국이 수출 및 교역순위※※※ 1위 유지(미국이 2위)

※ 1~8월 누적증가율(%): (한국) 16.4, (네덜란드) 12.0, (일본) 8.3, (홍콩) 8.2, (중국) 7.6

※※ 한국 수출순위: (2013) 7위 → (2014) 7 → (2015) 6 → (2016) 8 → (2017.1~8월) 6

※※※ 11~20위 국가 순위변동: 벨기에 11위로 상승, 인도 18위로 상승

○ [세계 수출 전망] 3분기에도 완만한 교역 회복세 지속 전망(WTOI=102.6)

※ WTOI(세계교역전망지수, World Trade Outlook Indicator) 100은 추세(trend)를 의미, 100 초과 시 추세 이상(above trend), 100 미만은 추세 미만(below trend)

○ [검토 및 향후 전망] (수출증가 원인) 선진·개도국 경기 동반 회복세※,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 SSD·OLED 등 주력품목 고부가가치화 등이 주요 요인

※ EU, 일본, 중국, 신흥유럽, 러시아가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세 견인(IMF, 2017.10)

- (향후 전망)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브렉시트 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美 연준(FRB) 자산매입 축소, 조업일수 감소(4분기, △6.5일) 등으로 향후 수출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주요국 상품수출(WTO, 2017.10.17. 기준 /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2016.4분기		2017.1분기		2017.2분기		2017.1~8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중국	5,795	△5.3	4,804	7.7	5,639	8.7	14,366	7.6
2	미국	3,781	2.0	3,729	7.5	3,851	6.0	10,094	6.4
3	독일	3,314	0.6	3,408	4.8	3,521	1.3	9,346	5.3
4	일본	1,695	9.2	1,674	10.2	1,692	7.5	4,515	8.3
5	네덜란드	1,509	4.8	1,530	12.4	1,547	8.3	4,138	12.0
6	**한국**	**1,324**	**1.8**	**1,321**	**14.7**	**1,471**	**16.7**	**3,751**	**16.4**
7	홍콩	1,419	3.3	1,246	13.5	1,370	6.7	3,548	8.2
8	프랑스	1,277	△0.5	1,248	1.0	1,317	0.4	3,386	2.6
9	이탈리아	1,179	1.5	1,159	6.1	1,261	3.7	3,228	6.4
10	영국	1,082	△7.1	1,076	6.5	1,076	3.2	2,877	7.6
11	벨기에	977	0.2	1,025	3.6	1,057	2.5	2,773	4.5
12	캐나다	1,025	3.2	1,034	10.3	1,068	11.3	2,768	9.1
13	멕시코	1,001	4.1	947	11.2	1,028	9.7	2,655	10.1
14	싱가포르	892	6.5	889	16.0	906	5.2	2,433	10.7
15	러시아	826	1.9	826	36.5	835	23.1	2,198	26.4
16	스페인	734	3.0	777	11.5	795	2.5	2,050	7.0
17	대만	778	11.7	721	15.1	756	10.2	2,026	12.5
18	인도	675	6.1	770	18.7	707	7.2	1,941	11.5
19	스위스	806	7.1	712	5.4	763	△1.5	1,933	△1.4
20	태국	548	3.8	565	4.8	571	10.9	1,536	8.8

※ 국가별 순위는 2017.1~8월 수출액 기준

▌전 세계 교역순위(2017.1~8월 실적), (WTO, 2017.10.17. 기준 /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교역(수출+수입)			
	국가명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명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명	금액	증가율	비중
0	전체※	104,910	9.0		전체※	107,220	9.9		전체※	212,130	9.5	
1	중국	14,366	7.6	13.7	미국	15,734	6.6	14.7	중국	26,017	11.6	12.3
2	미국	10,094	6.4	9.6	중국	11,651	16.9	10.9	미국	25,828	6.5	12.2
3	독일	9,346	5.3	8.9	독일	7,530	8.0	7.0	독일	16,877	6.5	8.0
4	일본	4,515	8.3	4.3	일본	4,372	10.5	4.1	일본	8,887	9.4	4.2
5	네덜란드	4,138	12.0	3.9	영국	4,117	-3.4	3.8	네덜란드	7,792	11.7	3.7
6	**한국**	**3,751**	**16.4**	**3.6**	프랑스	4,003	6.1	3.7	프랑스	7,390	4.5	3.5
7	홍콩	3,548	8.2	3.4	홍콩	3,762	9.6	3.5	홍콩	7,311	8.9	3.4
8	프랑스	3,386	2.6	3.2	네덜란드	3,655	11.3	3.4	영국	6,994	0.8	3.3
9	이태리	3,228	6.4	3.1	**한국**	**3,133**	**19.8**	**2.9**	**한국**	**6,884**	**17.9**	**3.2**
10	영국	2,877	7.6	2.7	이태리	2,912	9.6	2.7	이태리	6,139	7.9	2.9
11	벨기에	2,773	4.5	2.6	인도	2,868	26.3	2.7	캐나다	5,618	7.7	2.6
12	캐나다	2,768	9.1	2.6	캐나다	2,850	6.4	2.7	멕시코	5,457	9.2	2.6
13	멕시코	2,655	10.1	2.5	멕시코	2,802	8.3	2.6	벨기에	5,389	4.8	2.5
14	싱가폴	2,433	10.7	2.3	벨기에	2,616	5.2	2.4	인도	4,809	19.8	2.3
15	러시아	2,198	26.4	2.1	스페인	2,239	10.2	2.1	싱가폴	4,551	11.3	2.1
16	스페인	2,050	7.0	2.0	싱가폴	2,119	12.0	2.0	스페인	4,289	8.6	2.0
17	대만	2,026	12.5	1.9	스위스	1,766	-1.1	1.6	대만	3,713	13.1	1.8
18	인도	1,941	11.5	1.9	대만	1,687	13.8	1.6	스위스	3,699	-1.2	1.7
19	스위스	1,933	-1.4	1.8	러시아	1,496	26.4	1.4	러시아	3,694	26.4	1.7
20	태국	1,536	8.8	1.5	터키	1,490	13.8	1.4	태국	2,984	11.9	1.4

※ 전체: 주요 71개국 (전 세계 교역의 90% 차지)의 실적

국내단신 과학기술중심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기본방향

❑ 과학기술중심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기본방향

○ [대상국가] 한국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10.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최종 확정·발표, 10.16.] 각 시도 관계자 우수사례 공유(9.1.) 및 연구개발 특구위 보고(9.21.)를 거쳤으며,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점검

- 아울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통합 '지역 혁신성장' TFT※(Task Force Team)를 발족

※ 과기정통부 내 지역을 매개로 하는 정책·사업을 소관하는 부서들이 매트릭스 조직 이론에 따라 구성되며, 제1차관실 연구성과정책관 지역연구진흥과가 총괄 기능을 담당

- (주요 목표) '스마트 균형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주도로 지역 내 자생력과 잠재력이 높은 부문에 혁신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동성과 다양성을 통해 형평(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적 성장을 달성

- (향후 계획) 기본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들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장기(부처협력과제) 및 단기(과기정통부 단독) 과제로 분류되어 TFT를 통해 이행될 예정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주요 내용▐

	〈AS-IS〉	〈TO-BE〉
철학	• 명목상 '지역균형발전'으로 하향평준화' 발생 → 현실적으로 수도권·대전 집중 등 지역편차 확대 ※ 수도권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초점	• 스마트균형성장 이념을 도입하여 지역 내 수월성과 지역 간 다양성을 통해 지역의 상향다양화(형평) 유도 ※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
정책방향	•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증대를 목표로 주력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정책 추진	• GRDP 증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주체/지원형태	• 중앙주도 인프라 중심의 외부자원 유입의 외생적(의존형) 성장 NPD(National Project Director)	•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립형(내생적) 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착근형 사업 추진 RPD(Regional Project Director)
지원방식	• 그간 지역 R&D 정책은 획일적 지원방식(제한된 메뉴판식) 위주로 추진	• 지역별·분야별 다양한 거점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똑똑한 성장 유도 추진
정책단위	•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혁신 주체 간 연계가 어려운 실정	• 지역혁신거점 위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제권역 및 생활권역 중심의 지역 성장 유도
스마트 거버넌스	• 지역 과학기술 정책으로 추진한 혁신기관들의 거점화가 비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성 초래	• 기존 혁신기관 간 체계적 거버넌스를 추진하여 지역주도의 효율적 성장 도모

국내단신

- (4대 전략분야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간 상호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4대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핵심과제들을 도출

- 1) 지역이 자기 주도적으로 R&D이슈※(경제발전, 삶의 질 제고)를 설정하고, 지역 연구개발(R&D) 기획※※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추진

  ※ 근해어류자원감소, 생활쓰레기개선 사물인터넷(IoT) 활용 등지역의특수성 반영

  ※※ 17개 시도에 지역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운영 유도(예: 부산 비스텝)

  ※※※ 지역 R&D 통계 정비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와 연계, 지역연구장비 시스템을 중앙 장비시스템과 연계, 중앙 지방 인력교류 활성화 등

- 2)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R&D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R&D 추진체계를 정비

  ※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신설(2018년 50억 원 시범사업 후 확대 실시) 등

- 3)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지역혁신 경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IT중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도 병행)하는 한편, 연구소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

  ※ 그간 5개 특구 현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지정 방식 개선, R&D 특구총량제 도입, 테스트베드 법제화 등 신기술·신산업 획기적 규제완화 등

  ※※ 2022년까지 1,400개 연구소기업 육성 추진, 한국전력 등 R&D 수행 공기업도 설립주체에 포함하는 등 설립주체 확대

-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 역할 확대를 위하여 지역 생활밀착형 현안이슈 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 추진을 활성화※하고, R&D적용 리빙랩※※(Living Lab) 확산과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등 사회혁신지원조직 활성화, 생활밀착형 R&D 사례 공유 등 추진

  ※ 지역공동체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 → 생활밀착형 문제 구체화

  ※※ 해결방안 도출(시제품 제작 등) → 주민 피드백→ 실증제품 개발→ 확대된 규모의 실증 지원

- 5)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부족한 혁신역량을 상호 보충※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은 물론 세계 속의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 지원도 적극 추진

  ※ 지역 상호간 인력 교류, 온 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 해외 우수 R&D클러스터와의 자매결연,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전주기적 글로벌 특화지원 프로그램 추진

연구지원 2017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7.10.17.)

○ [2017년 쌀 예상생산량] 3,955천 톤, 전년 대비 5.8%↓

※ (2016) 4,197천 톤 → (2017) 3,955

- (조정 현백률 90.4% 적용 시) (2016) 4,084천 톤 → (2017) 3,849
- (감소 원인) 재배면적 감소(3.1%↓), 10a당 생산량 감소(2.8%↓)

○ [재배면적] 754,716ha, 전년 대비 3.1%↓

※ (2016) 778,734ha → (2017) 754,716

- (감소 원인) 경지면적 감소,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에 의한 타 작물 전환 등

○ [10a당 예상생산량(현백률 92.9%)] 524kg, 전년 대비 2.8%↓

※ (2016) 539kg → (2017) 524

- (조정 현백률 90.4% 적용 시) (2016) 525kg → (2017) 510
- (감소 원인) 모내기 시기(이앙기, 5월 상순~6월 상순)의 가뭄 영향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이삭수 감소,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잦은 강수 및 일조시간 감소로 1㎡당 낟알수 감소

※ 유수형성 및 수잉기※※: 7월 상순~8월 상순, 출수 및 개화기: 8월 중순~하순

※※ 수잉기: 벼의 유수(어린이 삭)의 길이가 급속히 신장하여 외관적으로 잎집이 불룩하게 보이는 추수 전 16~2일의 기간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현황▐

구 분	평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생 산 량(만 톤)	394	401	423	424	433	420	396	-5.8	0.5
10a당 생산량(kg)	522	473	508	520	542	539	524	-2.8	0.4
재 배 면 적(천ha)	(755)	849	833	816	799	779	755	-3.1	-

※ 평년 10a당 생산량: 최근 5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연도의 평균

※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 [연도별 추이] 최근 5년간(2012~2016) 재배면적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상호조로 10a당 생산량이 많아 총생산량은 400만 톤 이상 유지하였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및 10a당 생산량이 감소하여 400만 톤 이하로 감소 전환

○ [시·도별 생산량] 전남(82만 톤) > 충남(72만 2천 톤) > 전북(64만 8천 톤) 순이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55.4%차지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